

# '특감 복귀' 불렀다... 비리사범 검거

〈청와대〉

경찰, 공무원·언론사 간부·건설사 관계자 30명  
뇌물수수·직권남용·배임수재 등 혐의 적용  
수천만원 받고 대형공사 하청업체 선정 도와

각종 건설공사를 수수할 수 있게 해주고 돈을 받은 전직 공무원, 언론사 간부 등 건설 비리 사범 수십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일 복귀' 사태가 촉발된 사건이기도 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 국토관리청 국장 유모(60)씨를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 관련 고위 공무원을 소개 해주고 돈을 받아 행진 언론사 간부 허모(55)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현직 국토관리청 서기관 김모(51)씨, 건설사 관계자 등 28명은 뇌물수수·직권남용·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현직에 있던 지난 2012년 특정 교량 점검 업체가 국토부 발주 공사를 맡을 수 있게 내부 정보를 알려 주고, 이 업체가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원청업체를 압박해주는 대가로 제니스 승용차 등 약 5000만원을 받아왔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업체가 당시 유씨를 통해 100억원대 공사를 맡았고, 유씨가 2016년 퇴직할 때까지 국토부가 진행하는 공사 40건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 소속 현직 공무원인 김씨는 6000억원 규모 민자도로 사업을 담당하면서 방음 터널 전문 공사 업체가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게 힘을 써주

는 대가로 약 1000만원을 받았고, 이 업체는 김씨를 통해 60억원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인 검찰 수사관이 특수수사과를 찾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는 게 바로 이 사건이다. 해당 업체 대표 최모(58)씨와 해당 수사관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가 불거진 후 '골프 논란' 등 특감반원 비위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청와대는 결국 반원 전원을 원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낸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조사 중이다. 또 언론사 간부 허씨는 국토부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 중·소 규모 건설사들을 상대로 국토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공무원들을 소개해주고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알선료 명목으로 약 4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건설사 접대를

받은 국토부 고위 공무원 나모(46)씨 등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김영란법 위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비위 사실을 통보 조치했다. 허씨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특정 건설사에 자신의 아파트 구입 비용 1억원을 요구, 돈을 주지 않으면 악의적인 기사를 실어 공사 수주를 막겠다고 협박해 결국 받아 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건설업체 직원 윤모(47)씨 등 8명은 하청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건설업체 상무 김모(52)씨 등 18명은 특정 업체에 대해 공개 입찰에서 담합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갑"의 위치를 악용해 권한을 남용한 이른바 '생활적폐' 범죄라며 "건설 업계 갑질 및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슬랜드 코디스 호텔에서 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방산 협력 확대”

### 한 뉴질랜드 정상회담

한국과 뉴질랜드는 상호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방산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내년 4월 진수를 거쳐 2020년 뉴질랜드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군용물자협력 약정은 유사시 두 나라 간의 탄약 등의 물자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이를 통해 미국 중심의 대(對) 중국 견제 전략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범위가 기존 호주를 넘어 뉴질랜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남극 연구분야에 대한 협력도 더욱 활성화 하기로 했다"며 "남극조약 최초 서명국인 뉴질랜드의 오랜 경험과 한국의 우수한 연구기술이 결합해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중요한 바이오, 헬스케어, 정보통신(ICT) 같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나라 국민 간 교류를 더욱 넓혀가기로 했다"며 "뉴질랜드는 이번 국민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자몽여권심사(eGate) 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워킹홀리데이, 농·축산업 훈련비자,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전문직 비자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방안도 협의했다"며 "뉴질랜드의 젊은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차세대 지도자 간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한국과 뉴질랜드는 상호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방산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내년 4월 진수를 거쳐 2020년 뉴질랜드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군용물자협력 약정은 유사시 두 나라 간의 탄약 등의 물자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이를 통해 미국 중심의 대(對) 중국 견제 전략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범위가 기존 호주를 넘어 뉴질랜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남극 연구분야에 대한 협력도 더욱 활성화 하기로 했다"며 "남극조약 최초 서명국인 뉴질랜드의 오랜 경험과 한국의 우수한 연구기술이 결합해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중요한 바이오, 헬스케어, 정보통신(ICT) 같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나라 국민 간 교류를 더욱 넓혀가기로 했다"며 "뉴질랜드는 이번 국민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자몽여권심사(eGate) 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워킹홀리데이, 농·축산업 훈련비자,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전문직 비자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방안도 협의했다"며 "뉴질랜드의 젊은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차세대 지도자 간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전북도, 연말연시 특별 공직감찰 실시

10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전북도는 공직기강 확립 및 비상 대응태세 유지를 위한 특별 공직감찰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연말연시를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공직사회의 확고한 기강확립을 통해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 분위기를 조성, 겨울철 재해 재난 등 비상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한 달간 연말연시 감찰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찰반을 도내 지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반 23명으로 편성, 감찰반원들은 행정부지사의 지휘 아래 해당 권역의 시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산하기관 등의 소속직원들에 대한 직무와 복무에 대해 노출과 압

행감찰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번 공직감찰 기간 중에는 금품향응수수 등 공무원 청렴의무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적업무로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 중 음주 등 복무무질과 병행하여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지연처리 행위, 재난 재해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태세 유지 실태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예방 문자 발송 및 자체교육 등 음주운전 근절 노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송년·신년 모임 등에서 지인, 동료 직원, 친구들과 어울려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칫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혈중알콜 농도가 0.03% 미만이어도 사고 등으로 적발되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히며 공무원

음주 운전자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엄벌할 계획이다. 또한, 과음은 성희롱·성폭력, 음주 소란, 폭력행위 등 2차 사고로 이어지 무단이탈 및 근무 중 음주 등 복무무질과 병행하여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지연처리 행위, 재난 재해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태세 유지 실태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번 공직감찰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예방 문자 발송 및 자체교육 등 음주운전 근절 노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송년·신년 모임 등에서 지인, 동료 직원, 친구들과 어울려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칫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혈중알콜 농도가 0.03% 미만이어도 사고 등으로 적발되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히며 공무원

## 태권도 제도개선 결과보고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국기원(이하 국기원)·대한민국태권도협회(이하 태협)·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이하 태장애)는 많은 태권도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18일 '국기 태권도 제도개선 공청회'를 마치고 태권도 제도개선 추진 관련 향후 일정을 밝혔다. 우선, 지난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분과별 보고서를 태권도단체(국기원, 태협, 진흥재단, 장애협) 홈페이지에 4일부터 12일까지 공개하고 공청회와는 별도로 국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한번 더 거칠 예정이다. 이번 공개되는 태권도 제도개선 보고서(①태권도 단체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②국내의 승품단 심사제도 및 단증발급 제도 개선 방안, ③WTA 교육기능 강화 및 확대방안, ④태권도 종사자 고용환경 개선 방안)는 각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아래의 대표 이메일을 활용하여 해당 단체에 질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태권도 4단체는 TF의 제도개선안과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들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이행 약속을 담은 태권도 4단체장 명의의 합의서를 마련하고, 금년도 말에 태권도 4단체장이 참여하는 공개 서명식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무주=전선기자

## 도, 새만금 유역 돈분 처리 전 과정 감시 강화

2019년부터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농가까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돈분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전북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를 사용하는 신고배출농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준

수시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새만금유역 허가규모(1천㎡ 이상)이상의 282개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2017년 1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하였으며, 2019

년 1월 1일부터는 신고 규모(사육면적 50㎡이상)이상 574개소 돼지 사육 농가까지 확대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속적인 홍보 교육을 통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등을 전수하여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진성기자